국립대 전임교원 670명 증원 요청

교육인적자원부가 학교 및 학급 수 신·증설로 인한 교원난을 해소하기 위해 6월 24일 행정자치부에 초·중·고교 교원 1만여 명 증원을 요청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공교육의 내실화를 다지려면 교원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판단 아래 2002년과 2003년에 각 1만명 등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2003년까지 모두 2만 2천명의 교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당초 초·중·고교 교원의 증원 계획에 따라 올해부터 2004년까지 해마다 5,500명씩 모두 2만 2천명의 교원을 신규 선발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올해의 경우 증원 계획 5,500명 중 절반에도 못 미치는 2,116명만 확보하는 데 그쳤다.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는 "교원난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6월 말부터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민주당 공교육특별위원회 등과 여러 차례에 걸쳐 이같은 방안을 협의했다"고 말했다. 2003년까지 계획대로 교원이 충원되면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는 현재 35.5명에서 31.2명, 중학교는 38명에서 34.1명, 고교는 42.7명에서 39.2명으로 낮아진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학급당 평균 학생 수와 비슷한 수치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또 현재 65.5%에 불과한 국립대 교수 확보율을 내년중 68.7%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670명의 전임교원 증원을 행자부에 요구했다.

기업형 대학 설립 검토

교육인적자원부는 6월 26일 "'국가인적자원개발 비전 및 추진전략연구팀'이 대학의 형태를 다양화하는 내용의 '대학 지배구조 개선안'을 마련했다"면서 "부처간 협의와 여론수렴을 거쳐 오는 9월중 확정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업형 대학(University Company 또는 For-profit University)은 사기업처럼 설립자 또는 투자자들이 투자 후에 이익을 내면 배당 등을 통해 이익금을 가져갈 수 있다. 교육사업에 관심있는 돈 많은 투자자들이 대학에 돈을 투자할 길이 열리는 것이다. 또 투자는 가능하지만 과실송금을 못해 그동안 들어오지 못했던 외국 대학의 국내 진출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 대학은 육영사업의 성격을 지녔다는 이유로 비영리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대학 외부로 유출시키지 못하고 원칙적으로 대학에 재투자하도록 돼 있다. 기업형 대학 설립이 허용되려면 사립학교법 등의 개정이 필요해 이르면 2003년부터 가능할 전망이라고 교육인적자원부는 설명했다. 기업형 대학 설립 허용은 정보통신(IT) 기술의 발달로 온라인 대학교육이 확산되고 대학교육을 받고 싶어하는 성인들의 요구가 증가하는 데 따른 것으로, 일반 학생이나 직장인 모두를 입학 대상으로 한다.

특히 수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시장수요에 맞는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을 신속히 개발하거나 학과를 개설하고 수요가 줄어들 경우 언제든 폐과하는 등 효율적인 경영이 가능하다. 가령 특정 기업이 실용성 있고 취업도 용이한 프로그램을 갖춘 기업형 대학을 설립해 운영할 경우 학생들이 대거 몰려 상당한 이익을 낼 수도 있다. 기존의 대학도 기업형 대학으로의 전환을 인가해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으나, 엄격한 심사와 평가를 통해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될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는 "기업형 대학이 등장하면 대학을 포함한 기존의 교육기관도 자극을 받아 교육서비스가 좋아지고, 상호경쟁을 통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역별 IT 전문대학원 설치

교육인적자원부는 6월 26일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IT인력개발특위(위원장 김효석)' 첫 회의에서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등 4개 권역별로 3~4개씩, 최대 16개의 정보통신 전문대학원 설립이 추진된다는 내용의 'IT인력양성 방안'을 보고했다. 정기오 교육인적자원부 정책국장은 "현실감 있는 우수 인력을 양성·공급 할 수 있는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면서 "IT분야의 핵심인력 양성을 위해 정원 100명 이하의 정보통신 전문대학원을 권역별로 3~4개씩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인적자원부가 마련한 'IT인력양성 방안'에 따르면 IT전문대학원에는 기존 정보통신 관련학과의 기본 전공은 물론 기초학문을 연계한 생명공학, 우주공학, 환경공학, 나노테크놀로지, 콘텐츠테크놀로지 등의 전공학과도 설치될 예정이다.

특히 이들 대학원에 대해서는 정부가 기자재, 장학금, 교수요원 충담금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 대학당 50억 원 안팎씩 총 1천억 원의 재정지원이 따르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또한 인문사회 및 자연과학 계열 학생에 대한 IT 전공 학점제를 도입, 졸업 소요 학점 중에서 IT관련 과목 이수를 필수화하도록 권장키로 했다. 아울러 지리학과에 지리정보시스템(GIS), 경영학과에 MIS 등 교과과정 개편을 적극 지원해 인문사회·자연대학 등 IT 비전공자에게도 IT교육 기회를 확대키로 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를 위해 260억 원의 재원을 투입, 교육학술정보원 주관으로 외국 우수교수 브레인 풀(Pool)을 구축하고 우수 교수 초빙사업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2003학년도 대입 전형계획 예고안 공고

현재 고교 2년생이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치르는 200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내년 11월 6일 실시되며 수능 성적은 같은 해 12월 2일 발표될 예정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6월 27일 이 같은 내용의 '2003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 예고안'을 공고했다. 이 안에 따르면 2003학년도 대학입시는 2002학년도와 같이 수시 1학기 모집, 수시 2학기 모집, 정시모집, 수시 추가모집 등으로 나눠 실시되며 정시모집은 대학을 3개군으로 나눠 실시된다.

의학, 치의학 등 2003학년도부터 전문대학원제도를 도입하는 일부 학부에서는 신입생을 모집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들 학부는 2003학년도부터 신입생을 모집하지 않을 경우 2005학년도부터 일반 대학 졸업생 등을 대상으로 전문대학원 신입생을 모집한다.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기준일은 3학년 2학기 기말고사 실시 이후인 11월 22일이다. 각 대학은 올 10월 말까지 2003학년도 입학전형계획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한다.

'2005 고등교육 혁신안' 마련

현재 중3 학생이 대학에 들어가는 오는 2005학년도 입시부터 대학입시 제도를 전면 자율화하는 방안이 추진중이다. 이 방안이 확정되면 학생 선발 시기, 수능 성적 활용 여부, 본고사 형태의 지필고사 실시 여부 등 대입 전형 방법과 일정이 전적으로 대학 자율에 맡겨져, 대입 제도가 근본적으로 달라질 전망이다. 또 현재 사립대의 50% 수준인 국립대 등록금을 2005년까지 사립대의 80% 수준으로 올린다는 목표 아래, 2003년부터 국립대 등록금 인상률을 대학별로 부분 자율화해 점진적으로 등록금을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2005 고등교육 혁신안'을 마련, 부처간 협의와 당·정 조율을 거쳐 9월중 확정·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혁신안에 따르면, 입시를 대학 자율에 거의 맡기되, 순수 대학 관계자들로 구성된 '입학관리원(가칭)'을 설치해 객관적인 전형기준 마련 등 대입 전과정을 자율 조정하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시모집과 특별전형 확대 등 입시 제도가 점차 다양화되는 추세에 맞춰 2005년부터는 대학 자율로 신입생을 뽑는 미국식 입시 제도를 지향한다는 게 혁신안의 목표"라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처럼 대학이 어떻게 학생을 뽑든 학부모나 학생이 관여하지 못하도록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대학의 학생 선발 권리를 명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기업의 대학 기부금 세제혜택 확대 건의

대통령자문기구인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위원장 배무기 울산대 총장)는 6월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가인적자원개발 정책보고서'를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위원회는 국가인적자원개발의 주요 현안으로 ▲공교육 기반 강화 ▲대학의 지식창출 및 전문인력의 핵심 기지화 ▲기업의 학습조직화 및 지식근로자 육성 ▲여성인적자원개발 및 활용 극대화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정책방안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대학을 전문인력 양성의 핵심기지로 만들기 위한 대학재정난 타개를 위해 기여입학제를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나 대학의 기부금 모금을 돕기 위해 대학에 기부금을 내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기업이 사립대에 시설비 · 교육비 · 연구비로 내는 기부금에 대해 2003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소득액의 50% 안에서 손비 처리가 가능토록 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을 바꿔, 소득액의 100%를 손비로 처리할 수 있게 하고 2003년 말까지인 한시기간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수능시험 등 대학의 전형에 필요한 기본적 자료는 국가에서 계속 제공하되, 대학의 학생 선발 자율권을 확대하고 등록금 책정을 실질적으로 자율화해 대학 재정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공교육 기반강화를 위해 현재 GDP 대비 4.6%인 교육재정 규모를 앞으로 2년내에 GDP 대비 5%로 늘리고 교사 1인당 학생수를 현재 23.0명에서 20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또 기업의 인적자원 개발 책무를 강화하기 위해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인증제'를 도입하고, 노 · 사 · 정이 공동 출연해 근로자가 직장에 다니면서도 평생학습기관에 다닐 수 있도록 '개인학습계좌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경시대회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상 대폭 감축

교육인적자원부는 7월 2일 '각종 행사 관련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우등상 및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규칙'을 개정, 내년 1월부터 각종 행사나 경시대회 입상자들에게 주는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상 숫자를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관상을 줄 수 있는 행사 · 대회는 ▲교육인적자원부와 직속 산하기관, 정부 각 부처가 주최하거나 ▲교육인적자원부가 예산, 인력을 지원하거나 ▲국무총리상 이상이 수여되는 행사 가운데 주관 부처의 협조요청이 있는 행사로 대폭 제한된다. 국무총리상 이하의 상을 주는 민간단체 주최 행사는 종전까지는 상과 후원 명칭을 모두 사용할 수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후원 명칭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장관상을 줄 수 있는 행사 · 대회이더라도 ▲교육적 의의가 없고 전국 규모가 아니거나 ▲참가비를 부담하게 하거나 ▲학교교육에 지장을 줄 경우에는 역시 상을 주지 않을 방침이다. 이번 규칙 개정은 지난 '97학년도부터 대입 특별전형에 각종 경

시대회 및 대회입상자 전형이 포함된 이후 이상과열현상을 보이고 있는 '경시대회 열풍'을 잠재우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상 가운데 다른 부처나 단체의 협조요청으로 승인한 것을 제외하고 교육인적자원부 실·국에서 직접 준상은 '98년에 211건, '99년도에 396건, 2000년에 462건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장관상을 줄이는 대신 해마다 시·도 교육청이 추천하는 학예, 선·효행, 예·체능, 기능, 봉사, 환경 등 6개 분야 관련 대회 입상자를 심사, 400여 명을 선정해 매년 11월 3일 '학생의 날'에 특별 시상할 계획이다.

여성인력 양성법 제정 추진

올해 11월 '올해의 여성과학기술자상'이 신설되고 정부 과학기술분야 각종 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여성 위원 비율이 16.1%(지난해 말 기준)에서 내년 말 30%까지 확대된다. 과학기술부는 7월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성과학기술인력의 양성 및 고용촉진을 위한 법령' 제정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기부는 상과 관련, 국내의 대학, 출연연구소, 기업연구소 등에 근무하는 여성 과학기술자와 한국계 여성 과학자로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한 여성을 대상으로 이학·공학·진흥부문 등 3개 부분(상금 각각 1,000만원)으로 나눠 시상할 계획이다.

과기부는 또 여성과학기술인력 채용목표제를 도입,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 국·공립 연구기관, 대학교, 정부 출연연구소를 중심으로 여성연구원의 채용비율을 오는 2003년까지 10%, 2010년까지 20%까지 올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과기부는 이달부터 우수한 여학생의 과학기술 친화력을 배양하고 여성 과학기술인 성공모델을 제시해 장차 훌륭한 전문가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WISE 프로그램'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WISE 프로그램'은 우수한 여학생을 유치하고 공대에 진학한 여학생의 학업 성취를 지원하기 위해 현재 미국 퍼듀 공대, 버클리 공대, 미시간 공대 등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연구실 탐방, 사이버 인터뷰, 컨퍼런스 등으로 구성돼 있다.

20개 국·공립대 건축학과 5년제 추진

교육인적자원부는 7월 17일 국·공립대를 대상으로 건축학과 5년제 전환 신청을 받은 결과, 건축공학과 및 건축학과를 운영중인 13개 대가 신청했다고 밝혔다. 서울대·경북대 등 7개 국·공립대는 신청하지 않았으나 학칙 변경을 통해 5년제로 바꾸기로 했다. 이에 따라 건축학과를 희망하는 올해 수험생들은 5년제를 염두에 두고 지원해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는 "국·공립대의 건축학과 5년제는 국제 수준의 건축사 자격에 맞추기 위한 조치"라면서 "5년제에 따른 교수 충원을 위해 행정자치부 등과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청 대학은 정원 조정이나 학과 개설 등이 필요한 대학"이라고 덧붙였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건축학과를 5년제로 전환하더라도 학과모집을 금지, 건축공학·도시공학 등과 함께 학부 모집만 허용하기로 했다. 따라서 건축학과 선택은 2~3학년 때 가능하다. 사립대는 건축학과의 정원 조정이 없는 한 자율적으로 학칙을 개정, 5년제로 개편할 수 있다. 하지만 상당수의 사립대들은 건축학과를 5년제로 변경하려면 교수의 추가 확보가 필요한데다 학생들의 기피 등을 감안,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축학과 5년제는 '99년 국제건축가연맹(UIA)에 의해 마련된 "건축사 자격을 인정받으려면 최소 5년간 인증된 건축 교육과정을 이수하

고 2년 이상의 수련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국가간 건축사 자격 상호인정 안에 따른 것이다.

'교육여건 개선 추진 계획' 보고

김대중 대통령은 7월 20일 청와대에서 한완상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교육여건 개선 추진계획'을 보고 받았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제 7차 교육과정에서는 고교생들이 선택에 따라 배운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교육인적자원부가 수능시험의 시험과목, 시험 횟수, 총점 기준 등급제 등을 재조정해 수능시험의 틀을 다시 짜도록 돼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수능시험을 공통과목에 대해 치르는 수능Ⅰ과 수험생들이 특정 과목을 골라 치르는 수능Ⅱ로 이원화하는 방법 등을 포함한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고교에서 학생부에 수우미양가 등 평어와 과목별 석차를 기록하는 방식 대신 교과목을 성공적으로 이수했는지만 기록하는 제도(Pass/Fail)를 일부 과목에 도입하기로 했으며 장기적으로 최소한의 기준만을 제시하고 대입 제도를 완전히 자율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대학별 본고사, 고교 등급제, 기여입학제 등은 현재와 같이 금지되며 대학 입학 시기 등은 완전 자율화될 전망이다. 자립형 사립고와 관련해서는, 올 10월까지 30개교 이내의 시범학교를 선정해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운영할 수 있도록 법령을 고치기로 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국립대가 학생정원 인사 재정 등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등록금도 연간 20% 범위 내에서 2004학년도까지 자율 인상할 수 있도록 해 국립대 등록금이 크게 오를 전망이다. 또한 외국 대학원 설립을 유치해 내년 9월부터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그리고, 2004년까지 4조 3,787억 원을 투입, ▲학급당 학생 수 35명으로 감축 ▲교원 2만 3,600명 증원 ▲교실 확충 ▲국립대 교수 증원 ▲기초학문 육성 등을 추진하기로 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를 마쳤다. 한편 김 대통령은 이날 "학생선발권을 대학에 완전히 일임하는 자율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야 한다"면서 "장기간 가족과 별거하고 있는 교원들에 대한 전보 방안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외국인 유학생 취업 제한 완화

교육인적자원부는 7월 25일 현재 6,160명에 불과한 국내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을 2003년까지 1만 2,000명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유학생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고 한국유학박람회를 개최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외국인유학생 유치 확대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유학생 비자 소지자는 국내 취업을 할 수 없으나 앞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허가를 받아 주당 10시간 이내에서 제한적으로 취업을 허용하고, 유학비자를 발급할 때 재정보증인에게 미화 1만 달러 이상이 입금된 예금 증명서를 요구하는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교육

2005학년도 이후
대학 입시 제도 및 교과과정 변화

		현행	개선안
수능	과목	5개 영역	다양화
	횟수	1회	수능Ⅰ, Ⅱ 분리검토
	시기	11월 초	조기실시검토
	등급제	총점 기준	폐지가능성 높음
학생부성적		평어, 석차	일부 과목 이수 여부만 표시
학기당 학습과목 수		10여 개	6, 7개

※ 수능 등은 확정안이 아님. 올 12월 최종 확정 예정

인적자원부는 또 국내 대학과 대학원이 유학생을 위한 영어 강좌를 확대하도록 2003년부터 3년간 30개 강좌에 대해 30억 원을 지원하고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기 위해 '한국어 교수 자격 인증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동남아 국가의 우수한 고졸 인력이 한국에 쉽게 유학할 수 있도록 유학비용을 한국과 해당국이 절반씩 분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중국 및 동남아 지역의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7~9월 중국 칭다오(靑島), 장춘(長春),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일본 고베(神戶)에서 열리는 유학박람회에 참가하고 10월에 인도 뉴델리와 베트남 호치민 등지에서 유학설명회를 열기로 했다.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는 "해외로 유학가는 학생이 한해 15만 명인데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는 6,000여 명에 불과해 유학 수지 적자가 연간 8억 달러나 된다"면서 "유학 적자를 해소하고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외국인 유학생을 적극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내년 입시 IT학과 3천 355명 증원

민주당 IT인력개발특별위원회는 7월 22일 국회에서 교육인적자원부와 당정 협의를 갖고 IT인력이 지난해 9월 현재 4만명이 부족하고 2005년까지 추가로 14만 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이같이 증원하기로 결정했다. 당정은 우선 국·공립대학은 내년도에 IT 관련학과 중심으로 390명, 수도권 소재 대학은 530명을 각각 증원하도록 했다. 또한 지방사립대학은 교육여건 확보계획(교사 및 교원 확보율 65%)을 충족하는 경우 대학이 자율적으로 조정하되 2천 435명을 증원하도록 했다. 이 같은 IT증원계획은 내년도 대학입시 총 증원 5천 799명의 57.9%에 해당한다. 또 판교신도시내에 IT전문대학원 1곳을 설립하고,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충청과 호남, 영남에 IT전문대학원 또는 학부를 각각 1곳씩 설립하기로 했다. IT인력개발특별위원회 김효석 위원장은 "IT관련 사설 학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비정규 교육분야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IT교육인력도 병역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병무청과 협의해 8월 말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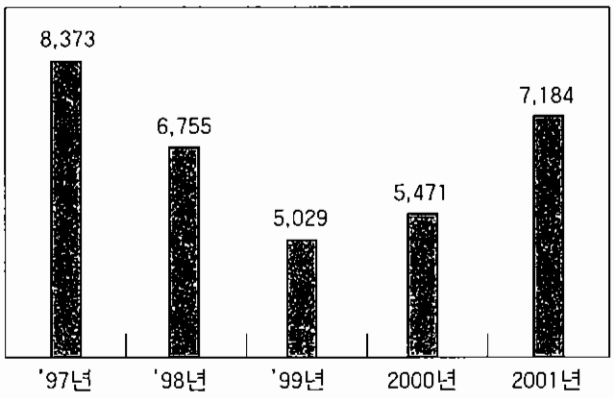
교직발전 종합방안 발표

교육인적자원부는 7월 26일 교사 사기진작책의 일환으로 10개 분야 32개 항목의 '교직발전 종합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컴퓨터나 애니메이션 등 교사 양성이 어려운 분야에 국한해 전문적 직업 경험을 가진 인력이 교단에 설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된다. 대상으로는 인간문화재나 예체능 국제대회 입상자, 기술자격증 소지자 등이 검토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주당 근무시간 44시간 내에서 하루 근무시간 총량을 정해 학교 단위로 교사들이 탄력적인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2004년까지 교원 보수를 민간 중견기업 수준으로 올리고 2005년까지 학급담임수당을 현재 8만원에서 20만원으로, 보직수당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각각 인상키로 했다.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사가 국내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를 받기 위해 휴직하면 월급 전부와 연수비 일부를 지급하는 자율 연수휴직제도를 연내 도입하고, 내년부터 교사 장기해외유학제를 도입, 2005년까지 286명을 선발키로 했다. 한국교총은 이와 관련, 이날 성명을 내고 "수석교사제 도입, 교원전문대학원 도입 등 교사 자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안은 모두 빠져 있고, 교사 수 부족으로 실현가능성이 희

연도별 상반기 외국인 강사 입국자 수 추이

(단위 : 명)



• 자료 : 출입국관리국

박한 방안들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도 "수석교사제 유보 등에는 찬성하지만 전문직의 교사 임용 등은 배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교수 고용 목표제 추진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는 7월 31일 "여성 박사 학위 취득자가 크게 늘고 있는데도 실제 교수 취업은 남자의 절반에 그쳐 대학 사회가 아직 여성인력 활용에 뒤쳐져 있다"며 "관련법을 개정해 다른 정부 부처와 같이 국·공립대의 경우 일정 비율을 여교수로 충원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전임강사 이상의 여교수 비율이 국립대 9% 공립대 8%로, 사립대 16%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 성차별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교육인적자원부는 여성개발원 등에 연구용역을 의뢰, 외국 사례를 중심으로 한 기초 조사를 끝낸 상태이며, 8~9월 현직 여교수와 대학총장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고용목표 비율 등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여성공무원의 경우 채용목표제가 1996년부터 실시되고 있으며, 공기업 여성고용 인센티브 제도도 함께 시행되고 있다.

비리 심한 대학 재단 이사회 절차 관계없이 해임 정당

사학재단 이사진의 비리 정도가 심했다면 교육인적자원부의 해임 과정에 일부 문제가 있었더라도 결과적으로 그 해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7부(곽동효 부장판사)는 7월 29일 서일대학 재단인 세방학원의 이용곤 전 이사장 등 전 이사진 9명이 "무리한 시정조치 요구를 이행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임원승인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교육인적자원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전 이사장 등이 학교 예산을 부동산 매입 등에 무단 유용하고 무자격자인 아들 등을 교원으로 채용하는가 하면 서일대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조성된 교비 중 19%만을 교수 인건비와 연구비 등에 사용하는 등 비리를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교육인적자원부가 해임 전 제시한 시정요구 중 277여 억원에 이르는 29건의 부동산을 15일 내에 매각하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실행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그러나 이사진의 위법행위가 사립학교 임원의 자율성을 존중할 수 없을 정도로 크므로 교육인적자원부의 해임 조치가 재량권 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전 이사장 등은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해 감사를 통해 적발한 세방학원의 29가

지 위법 부당사항에 대해 12건의 시정조치를 요구해 이중 11건은 시정했으나 부동산 매각건이 해결되지 않아 해임되자 소송을 내 1심에서는 승소했다.

국립대 병원 · 치과병원 분리 운영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국립대 병원은 원래의 명칭과 별도로 '치과병원'이란 이름을 분리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8월 5일 국립대학교 병원설치법 개정안과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 개정안을 이같이 입법예고, 국립대 병원의 경영 효율화와 전문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는 국내 모든 국립대병원의 명칭은 대학교 이름에 '병원'을 붙여 사용하도록 돼 있지만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는 대학교 이름 뒤에 '병원' 또는 '치과병원'을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부산대학 병원을 예로 들면 현행 '부산대학병원'과 별도로 '부산대치과병원'이란 이름을 또 경영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국립대 병원은 반드시 이사 중 1명 이상을 외부의 병원 경영 경험이 있는 전문 경영인을 선임토록 했다.

대학에 '무역인력 인큐베이터' 설치

산업자원부는 무역협회와 공동으로 9월부터 지방대 중심으로 7~9개 대에 '무역인력 인큐베이터'를 설치, 운영키로 했다고 8월 9일 밝혔다. 무역인력 인큐베이터는 이론 중심의 대학교육에 실무지식과 현장경험을 접목, 기업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양질의 무역 전문인력을 키우기 위한 제도다. 이 프로그램은 대학 3, 4학년을 대상으로 무역실무와 인터넷무역 · 무역마케팅 · 수출입절차 · 무역영어 등 실무교육과 지역업체에서의 인턴십을 거치도록 구성했다. 특히 인턴십을 통해 기업의 만족도가 높은 학생의 경우 정식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운영, 취업난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산자부는 기대했다. 산자부는 이달 중 공고를 통해 이 프로그램의 학점인정 여부, 관내 업체와의 협력관계, 지방소재 여부 등을 고려해 대상 대학을 선정할 계획이다.

사이버대 학생도 병역연기 혜택

교육인적자원부는 올해 3월 첫 개교한 9개 사이버 대학이 일반 대학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요구하고 있는 병역연기 등 사이버 대학 관련 사항을 개선키로 하고 재정경제부, 보건복지부, 병무청 등 관련부처와 함께 관련 법령을 개정키로 했다고 8월 15일 밝혔다. 개선안은 사이버 대학 재학생도 일반 대학생과 마찬가지로 재학기간 중 병역의무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전문학위 과정은 만 22세, 전문학사학위 과정은 만 24세까지 병역 연기 혜택을 주도록 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아직까지 사이버 대학 재학생은 직장인이 많지만 사이버 대학이 활성화되면 병역을 마치지 않은 학생들도 늘어날 것으로 보여 병역연기 혜택이 필요하다"며 "지난해 한국방송통신대학 재학생에게 병역연기 혜택을 준 만큼 병무청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사이버 대학 재학생은 올해 개교한 9개 대 6,220명이며 내년 3월 설립 승인을 받을 7개대 4,800명을 합치면 1만 1천여 명에 달한다. 또 사이버 대학 사회복지학과 출신자에게도 일정 과정을 이수하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주기로 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대학교 등록금 분납 · 연기 가능

교육인적자원부는 8월 15일 학생 · 학부모의 과중한 등록금 부담을 덜기 위해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을 엄격히 적용, 올 2학기부터 등록금 분납 및 신용카드 납부를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는 "국·공립대는 시행에 별다른 차질이 없겠지만 사립대의 경우 업무편의와 수입 감소 등을 우려해 반발이 예상된다"며 "올 2학기에 이같은 납부 방식이 정착되지 않으면 내년 1학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정착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또 현재 산업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대학들이 학점을 상대적으로 적게 신청한 학생에 대해서도 많이 신청한 학생과 차별 없이 일률적으로 같은 수준의 등록금을 받고 있어 이같은 징수 방식이 부당하다고 판단, 이수 학점이 적을수록 등록금을 적게 내도록 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대부분의 대학들이 연중 1·2학기로 나눠 받는 현행 등록금 징수 시기도 조정해 분기별로 연중 4차례로 나눠 낼 수 있도록 했으며, 나아가 대학 사정에 따라 월별 징수도 가능하도록 적극 권장키로 했다.

대학등록금 카드 납부 추진

규제개혁위원회는 8월 17일 대학등록금 납부제도 개선방안을 집중 논의, 현재 일부 사립대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학 등록금의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규제개혁위 관계자는 8월 19일 "대학등록금의 신용카드 납부제도는 사실상 등록금 납일 기일을 연장하는 효과를 지니고 있어 바람직하다"면서 "그러나 현재 1.5~4.5%에 이르는 신용카드 이용 수수료 부담과 등록 여부 확인 곤란 등 문제점이 있어 교육인적자원부에 개선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규제개혁위는 또 대학등록금을 일시에 납부하는데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 2학기부터 국립대학에 대해 등록금 분납제도를 전면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이어 등록금의 3분의 1~3분의 2에 대해서는 납일기일 2개월 연장이 가능하도록 등록금 납부 연기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기간제 교사제 도입 추진

교육인적자원부는 8월 12일 현재 전일(全日)제로만 운영되는 기간제 교사제도를 2학기부터 격일제, 반일제, 시간제까지 확대하고, 정규채용시 경력으로 인정하기로 교원 3단체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파트타임 교사의 신분보장을 위해 전일·격일·반일제는 1년 단위로, 시간제는 학기 및 1년 단위로 학교장과 계약하도록 하고, 계약기간내에는 본인의 동의 없이 면직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시·도 교육청과 지역교육청에 만들어질 파트타임 교사 지원자 '인력풀'에서만 교사를 채용하도록 해 개별 계약에 따른 잡음을 막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와 함께 농어촌 학교를 중심으로 국사교사가 윤리를, 수학교사가 과학을 가르치는 등의 '상치(相馳)교사'(전공이 다른 과목을 가르치는 교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청 소속 '순회교사'를 두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마련 중이다.

교육개혁 우수 29개 대학 선정

교육인적자원부는 8월 19일 ▲교육과정 개발·특성화 ▲대학별 자체 교육개혁 실천 등 2개 분야별로 재정지원을 신청한 전국 103개 대학에 대한 교육개혁 추진 실적 평가를 실시한 결과 29개 대학에 총 1백 45억 3천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교육과정 개발·특성화 분야에서는 학생수 5천명 이상 대학 중에서 가톨릭대·동국대·동의대·숙명여대·인제대·인하대·전주대 등 7개 대학이 3억 5천만~6억 5천만원을 지원받고, 학생수 5천명

미만 대학에서는 경산대 · 천안대 · 한국기술교육대 · 한신대 등 4개 대학이 4억 2천 5백만~5억 7천 5백만원을 받는다. 대학별 자체 교육개혁 실천 분야에서는 학생수 5천명 이상 대학 중 고려대 · 대구대 · 동서대 · 배재대 · 순천향대 · 울산대 · 원광대 · 이화여대 · 중앙대 · 한양대 · 홍익대 등 11개 대학이 3억 5천만~6억 5천만원을, 학생수 5천명 미만 대학 중 경일대 · 동양대 · 성공회대 · 포항공대 등 4개 대학이 4억 4천만~5억 6천만원을 각각 지원받는다. 한편 산업대 중에서는 교육과정 개발 및 특성화 분야에서 동명정보대 · 초당대가, 대학별 자체 교육개혁 실천 분야에서는 우송대가 선정됐다.

산업대생도 교직과목 이수 가능

교육인적자원부는 8월 22일 특성화 고교를 활성화하고 제 7차 교육과정 시행에 따라 늘어나는 선택과목 교사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산업대에 교직과목을 설치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산업대에서 디자인고, 애니메이션고, 조리과학고, 관광고 등 각종 특성화 고교의 디자인, 공예, 의상, 관광, 동 · 식물자원, 요업, 조경, 농산물 유통 관련 과목 교사를 양성, 해당 과목 임용시험을 거쳐 정규 교사로 채용할 계획이다. 그러나 산업대가 국어 영어 수학 등 현재 사범대와 4년제 일반대에서 양성중인 25개 과목 교직과정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하고 매년 엄격한 심사를 거쳐 제한된 과목의 교직과정만 승인하기로 했다.

기초의학 석사 이상 전공자 병역 특례

보건복지부는 8월 17일 보건의료 분야의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기초의학 분야의 석사 이상 전공자들에 대해 전문연구요원 병역특례 제도를 적용키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결정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의대, 치대, 한의대 등 기초의학 전공자들도 2003년부터 군복무 대신 보건산업 관련 연구기관의 연구요원으로 근무할 수 있게 된다. 현행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병무청장지정 연구기관의 연구요원으로 종사하는 석사 학위 이상 취득자에게 병역특례를 인정하는 것으로, 그동안 의대 등 기초의학 전공자들은 이 제도에서 제외돼 왔다. 의학 전공자들이 병역특례를 받으려면 연구 요원으로 5년간 근무해야 하며, 대상기관은 국립보건원 부설 중앙유전체연구소와 12개 질환군별 유전체연구소(대학병원 연구소), 식약청 부설 독성연구소, 국립암센터, 생명공학연구소 등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